

대구 부활의 길- '인공태양국가산업공원'

대구논단

조덕호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구는 우리나라 섬유 도시의 대명사로 1970년대 수출산업을 견인해 왔다. 그렇지만 80년대 이후 중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대구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992년 이후 연속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천396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3천739만 원보다 매우 낮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이다. 더구나 총인구의 감소, 특히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여, 동성로를 포함한 도심 상권이 죽어가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안타까운 것은 대구경제를 회생시킬 대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심 공항은 의성과 군위로 이전할 예정이다. 남부권 신공항은 가덕도에 건설될 것이 예상되며, 경북도청은 이미 안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렇다면 대구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대구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 나갈 것인가? 우선 대구의 회생을 위해서는 국가와 동남권, 대구가 함께 나서야 한다. 대구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며, 비교적 강수량이 적은 도시이다. 이것

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늘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도시로서 발전잠재력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고 이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하여 식량자원을 포함한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인간과 동물들의 먹거리가 된다.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직접 받아 쓰는 사업이 바로 태양광 혹은 태양열 산업 즉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며, 탄소제로2050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가 관련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태양을 직접 만드는 사업은 어떠한가?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핵분열이고 태양에너지의 원리는 핵융합이다. 다만 그 차이점은 원자력은 안전성과 함께 핵폐기를 처리가 큰 골칫거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개 선진국은 앞다투어 무한 청정에너지 사업인 인공태양 만들기 위해 뛰어들고 있고 국제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는 인공태양과 비슷하게 프랑스에서 국제적인 과제에 수행되고 있으며, 공정이 이미 반 이상이 진행된 상태이다. 인공태양 만들기는 1억 °C 이상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을 포함한 과학 기술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실험실 차원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韓國核融合에너지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FE)이 대전광역시에 있으며,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는 1995년 개발에 착수하여 2007년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핵융합연구로이

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이제는 연구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인공태양의 산업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원전과 친원전 정책을 반복하면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대전환과 탄소제로2050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산업인 핵융합 관련 '국가산업공원'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역간 갈등을 넘어 1천 3백만 명이 모여 사는 낙동강 권역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울·경은 신항만, 고속철도, 신공항 등 물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구시는 국가 및 부·울·경과 협력하여 낙동강 물도 살리면서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우선 북서대구 지역의 수질 및 대기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고 그 속에 무공해 청정 첨단산업인 '인공태양국가산업공원'을 신속히 유치하여 섬유와 염색으로 구성된 대구의 주력산업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대전환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과 동남권 지역상생발전, 특히 대구의 부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과제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동남권, 대구가 공동으로 개척해야 할 길이며, 하늘에서 쏟아지는 에너지를 받아쓰는 태양광산업을 뛰어넘어 에너지를 인공태양으로 만드는 Energetic Daegu로 거듭남으로써 50년 전 화려했던 대구의 부활과 동시에 미래 50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세계 선진국으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설

등 떠밀려 문 연 국회, 정상화 길은 아직 멀다

그제 21대 후반기 국회가 의장단을 구성하며 어렵게 출범했다.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4선 김영주 의원과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가 35일간의 공전을 끝내고 겨우 첫 단추를 끼웠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등 남은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여야가 말이 아닌 실제적인 타협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여야가 가장 접목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문제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자리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도 지금 와서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합의대로 여당이 의장단 구성에 협조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여당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순리로 보인다.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입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다. 국민의힘은 사법특위 구성 논의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

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여야가 5:5 동수로 구성하지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4월 합의한 검수완박 관련 기준합의를 지키라고 맞서고 있다.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국가 경제는 비상시국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물가 공포에 질린 국민은 지갑을 잠갔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부품 조달이 안 돼 우리나라의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접점이 쌓여있다. 국민의 비판 여론에 등 떠밀려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열기는 했지만 여야의 당리당략에 개점 휴업 상태이다.

거대 야당이 전반기 때처럼 의석수를 내세워 모든 것을 전횡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 의장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에 줘야 한다. 김진표 의장의 의장 후보 선출 당시 '체 몸'에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출산 당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회가 3류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

尹대통령 지지율 급락,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4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44.4%, 부정 평가는 50.2%로 나타났다. 지난달 첫째 주와 비교해 긍정은 7.7% 포인트 하락했고 부정은 9.9% 포인트 상승했다. 주말엔 부정 평가(51%)가 긍정 평가(45%)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도 지난달 첫째 주 66.2%에서 지난주 57.3%로 낮아졌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출근길에 "지지율 추세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 지지율(43%)이 3·9 대선의 득표율(48.56%)보다 낮아진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한참 외교적 성과를 올린 것을 감안하면 국정 지지율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 지지율을 깎아 내릴만한 정황들이 없진 않다.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다.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라고 하지만 검찰 출신 중심의 인사, 부적절한 장관

후보자의 잇단 기용, 장기화되는 검찰총장 공백,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잡음 등이 지지율을 하락시켰다.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잇따르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임명에 대한 민심의 향배는 어떻게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핵심 과제를 실천해야 할 참이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판도라 상자 같아 역대 정권이 차마 손대지 못한 과제들이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임무도 내지 못할 일이다.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파업 등을 원칙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떼법'에 밀린 것도 국민들을 실망시킨 요인이다. 40%대의 지지율로 개혁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더욱 인플레이션으로 실제 임금이 삭감되고, 주가·부동산·가상화폐 등의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특히 경제위기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되는 차상위계층의 불만을 외면한 실책도 있다. 국회 권력을 쥔 야당과 파격적인 소통으로 협치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방역당국 "원숭이두창,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가능성 아예 없어"

미디어 포커스

밀접접촉 통한 전파가 주 경로

일반 국민 대상 광범위 접종 불필요

방역당국이 최근 국내 유입된 원숭이두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여한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원숭이두창 전파경로는 밀접접촉과 비말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 감염경로는 밀접접촉"이라며 "코로나19처럼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숭이두창은 전파방식이 코로나19와 다르게 전파력도 그리 강하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원숭이두창이 만연할까 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의심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접촉 시에는 마스크가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예방접종 전략 역시 낮은 전파력을 근거로 마련됐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접종이 이뤄졌던 코로나19 유행과 달리 원숭이두창 백신은 밀접접촉자 중심의 포위 접종으로 이뤄진다고 당국은 전했다.

치명률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원숭이두창은 치명률이 3~8%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비공토지역과는 맞지 않은 수치"라며 "비공토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없다. 면역기능 저하 환자에게 발생하는 사례가 아니라면 치사율은 거의 0%"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창은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얼굴에 흉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원숭이두창은 두창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경미하다. 흉을 남기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연구됐다. 회복과정에서 어느정도 흉이 남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엷어지고 대부분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숭이두창은 감염 시 잠복기,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를 거치게 된다. 전구기에서는 두통·요통 등을 비롯해 림프절 종대가 목·사타구니 등에서 발생한다. 발진 증상은 반점, 구진, 수포, 농포, 딱지 순서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수두와 대체로 증상이 비슷한 가운데, 김남중 교수는 "반점과 구진, 수포, 농포, 딱지가 일정한 시기에 같은 형태라면 원숭이두창이 가능성이 더 크다. 중앙부 함몰이 있는 경우도 원숭이두창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도움이 되는 구분은 림프절 종대 여부"라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1710@idaegu.co.kr

※ 오피니언 면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